

석조문화재 진묵대사부도 가치 재조명 필요성 '공감'

도의회,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준비 위한 세미나 개최 "준비차원서 진묵대사 생애 등 학술연구 과제 추진해야"

'진묵대사부도'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준비를 위한 전북도의회 세미나가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12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불교석조문화재로서 진묵대사부도가 지닌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가 마련했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소재구 전 국립고궁박물관장은 부도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석조조형예술로서의 양식적 전개양상을 소개했고, 토론자들은 진묵대사의 생애와 불교사상, 그리고 진묵대사부도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을 위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도광스님은 진묵대사가 한국불교

에 남긴 족적과 의미를 언급하면서 "진묵대사의 사상이 유교와 불교, 도교를 아우르는 회통사상으로 입목될 수 있고 당시 가난한 민중들과 함께 하는 수행자였더라면 진묵대사의 생애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극석문연구회장으로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인 김진돈 회장은 "기록이나 금석문으로 남아 있는 진묵대사의 흔적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진묵조사유적'을 통해 진묵대사가 교류했던 인물이나 지역사 등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관련 사료 발굴과 문집 발간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영일 전북도 학예관은 "진묵대사와 진묵대사부도의 재조명 작업은 판

권 학술연구가 필수적"이라면서 "진묵대사부도의 역사적 가치와 특수성, 희소성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학술대회 개최 등 체계적인 준비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회장은 "불교문화유산은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라면서 "조선 중기 진묵대사가 한국불교에 남긴 족적과 함께 진묵대사부도가 석조문화재로서 지닌 가치를 학술적으로 고증하기 위한 꾸준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묵대사부도'는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에 있는 봉서사에 있고, 지난 1984년 전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도내 사찰 승탑 중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사례는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의 승탑(보물제88호)이 유일하다.

/유호상 기자



구호 의치는 소상공인연합회 전북 기초·광역회장 출범식 등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갖고 소상공인 정책 제언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결과 예산편성 반영

민주 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21일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분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대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11위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세계 7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 지난 5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분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의 한 주체로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행사위, 무주 수해복구사업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2일 지난해 폭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무주군 삼유천, 안창천을 방문하여 하천 범람과 제방유실 복구 현장을 둘러보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부터 무주읍 용포리에 위치한 삼유천은 홍수 단편이 협소하고, 낮은 제방으로 인해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재해방지를 위한 개선복구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25억 원을 투입해 약 8km 구간의 제방과 호안을 조성하고, 1.5km 구간의 홍수 방어벽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무주군 부남면에 위치한 안창천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일부 유



실된 제방 복구를 위해 1억 1천만 원을 투입해 144m 구간의 석축 쌓기공을 완료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면서 "올해도 장마, 태풍 등으로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항구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시의회, 집중호우 침수피해 복구 현장 방문

12일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철보면과 신외면의 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6~7일에 쏟아진 집중호우기간 동안 철보면은 160mm, 신외면 80mm의 폭우로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철보면 원촌마을과 신외면 당북마을 일원을 방문했다.

이날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 국민 알 권리 있어"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윤석열 부인 의혹 관련

"제1야당 불만... 이준석 그 쪽 당에 집이 될 수도"



지는 것도 아니다"며 "저는 대통령보다 아내인 총리가 되기 위해서도 이를 동안 청문회를 받았다. 심지어는 '머느리 성적 증명서 내버려라'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소회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 전 총장에게 김씨의 결혼 전 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리라면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은 묻지 말자는 얘기하고도 통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재직 시절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찰총장 재임 중의 말을 하기로 든다면 '그때 장모는 왜 불기소 처분했는가' 이런 얘기부터 시작되고 자기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라며 "그게 더 공경하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하루는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또 하루가 지나면 통일부 폐지하자고 한다. 국정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다"며 "지금 제1야당이 좀 불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전 대표는 "여가부 업무에 조정이 필요한 대목도 있다. 청소년 업무라든가 한부모 가정 업무가 그대로 좋은가 하는 문제는 있는데,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려는 본질적인 업무는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와 통일부를 폐지한다면 우리의 남북관계나 대외관계가 불편해질 것"이라며 "폐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실재로 폐지하면 더 큰 문제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짧은 정치 실력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지금 식으로 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그래 가지고는 그쪽 당의 집이 되는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靑, 대선 기간 특정 후보·정당 비방 국민청원 비공개 방침

20만 이상 동의해도 답변은 선거일 이후로 연기

청와대가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12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 9일까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운영정책에 따라 선거기간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

민청원은 비공개하며, 20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도 선거 관련 내용은 답변 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다.

이에 따라 특정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거나 시달려야 한다는 등의 정치적 청원 글은 당분간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처리될 예

정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 당시에도 이러한 선거기간 운영 정책을 적용했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